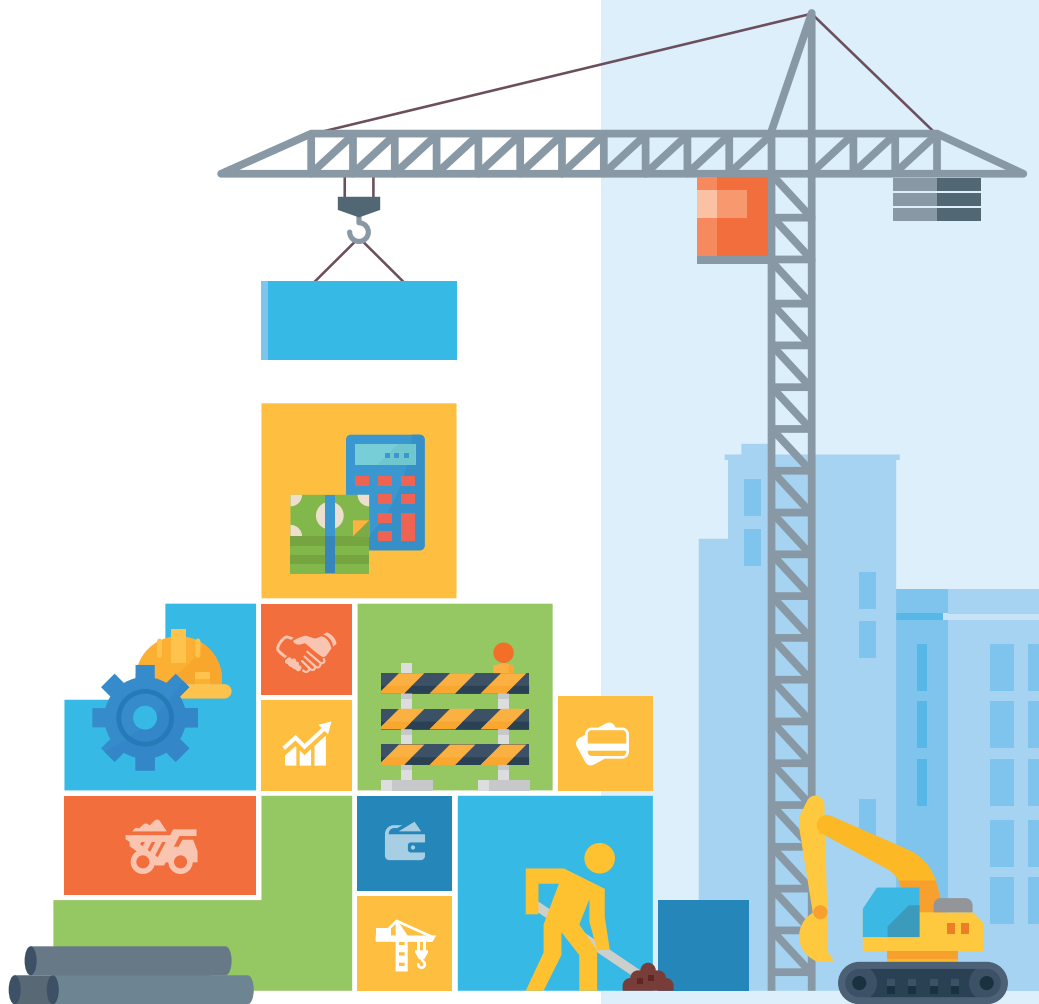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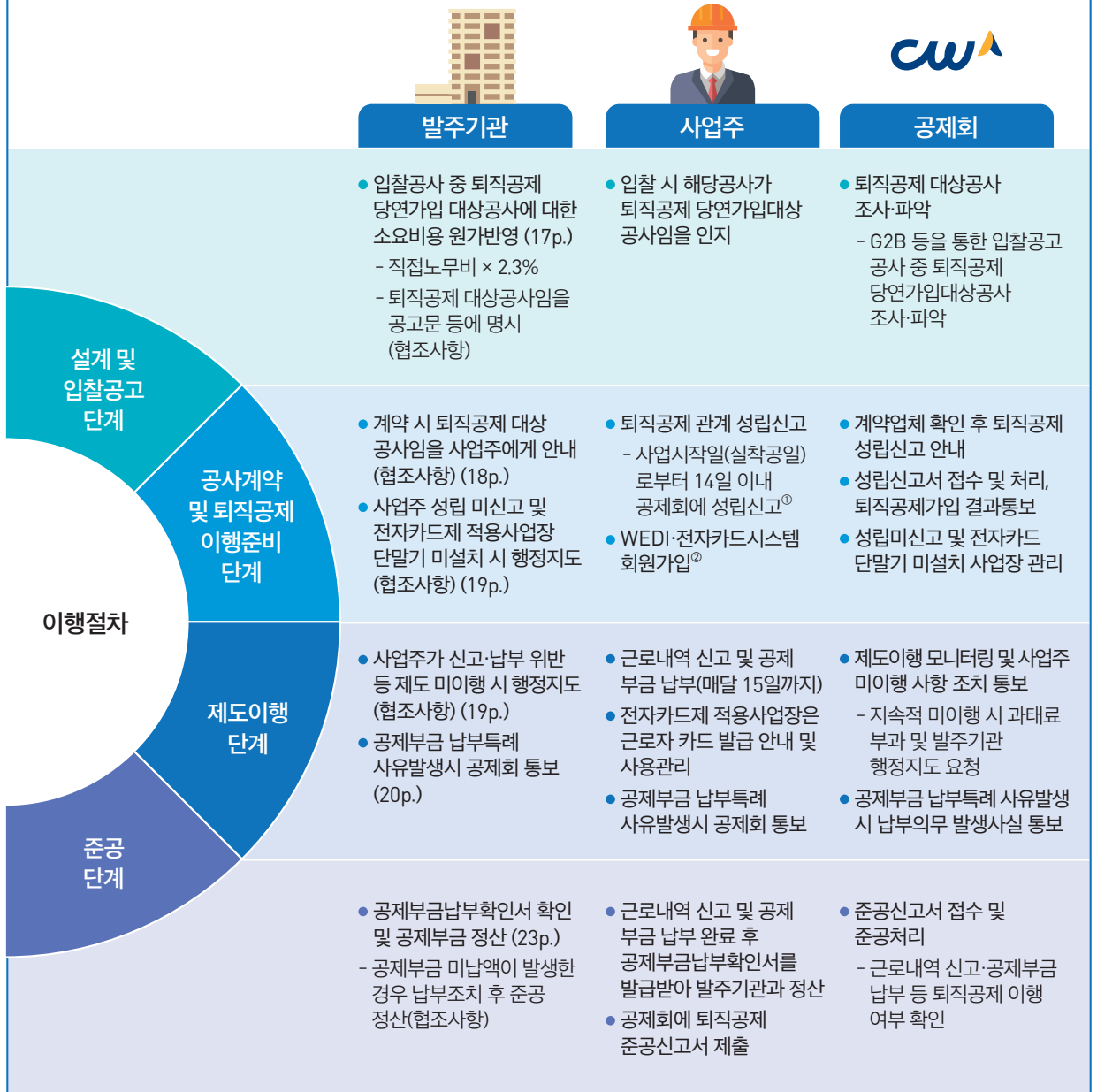


건설공사 발주기관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처리 안내자료



한 눈에 보는 퇴직공제제도 이행 주체별 역할



① 전자카드 적용사업장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단말기 설치 필요

② 원수급 대표사, 비대표사, 하수급사 모두 가입 필요

1	기관소개	2
2	퇴직공제제도 소개	4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4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9
3	공공 발주기관 대상 전자카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14
3	발주기관의 역할	16
1	제도이행 단계별 주요 역할	16
2	제도이행 주요 세부사항	17
	1.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17
	2. 사업주 성립신고 및 신고·납부 이행지도	18
	3.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적용	20
	4. 공제부금 정산	23
4	자주하는 질의·답변(FAQ)	26
5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안내	29
	공제회 본회·지사(센터) 연락처	30

1. 설립목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복지증진, 직업능력 향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 기관비전 :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삶의 버팀목

2. 설립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조직

3본부 1실 12부 7지사 5센터

4. 주요 연혁

1996	12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1997	12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설립(1997. 12. 09.)
1998	1월	퇴직공제사업 시작
2003	7월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 변경
2011	10월	훈련, 취업지원, 복지사업 실시
2013	1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지정
2013	4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사업 개시(고용부 위탁)
2015	3월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사업 개시(고용부 위탁)
2019	11월	개정 건설근로자법 공포(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 ※ '20. 5. 27. 시행
2020	5월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이상) 공제부금일액 인상(5,000원 → 6,500원)
2020	11월	전자카드제 시행(공공 100억·민간 300억 이상)
2021	5월	기능등급제 시행
2022	7월	전자카드제 적용범위 확대 시행(공공 50억·민간 100억)
2024	1월	전자카드제 적용범위 전면 확대 시행(공공 1억·민간 50억)

5. 주요 사업

구분	내용
퇴직공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 대한 공제부금 수납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
자산운용	건설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자산의 증식
복지지원	건설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건강관리, 자녀교육 및 가족친화 등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사업 제공
고용지원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및 취업 지원

복지지원 사업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년 기준)

생활안정 대부

주택 및 전세자금, 학자금
등 긴급 필요자금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한도)



건강관리



단체보험 가입

10,8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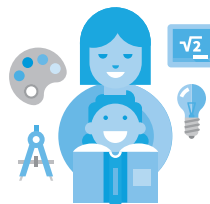


종합 건강검진

2,002명

자녀교육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가족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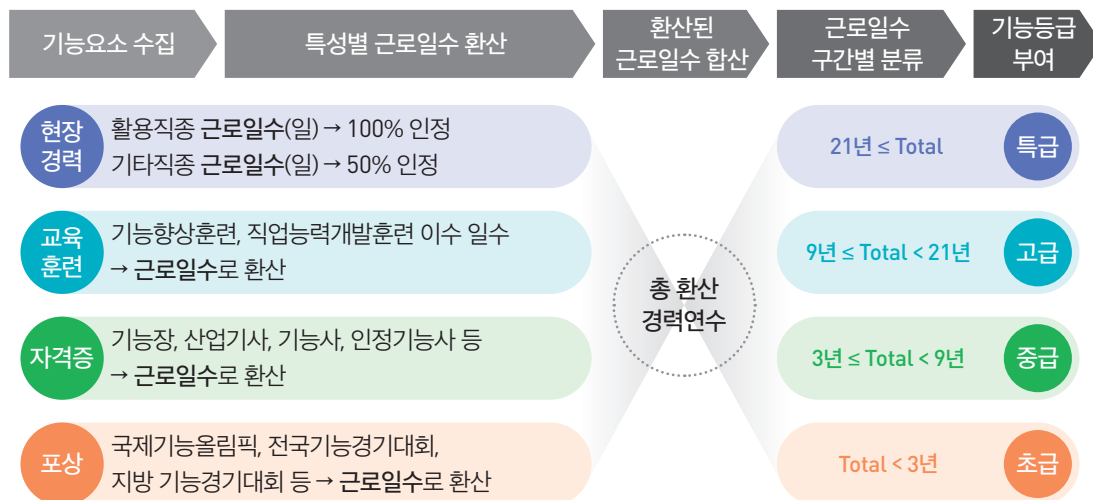
결혼·출산(유산) 지원
가족 휴가 지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21. 5. 27. 시행)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 교육·훈련, 포상을 기반으로 직종별 기능등급을 종합적으로 구분·관리하는 경력관리 체계입니다.

기능등급 산정기준



기대효과

근로자 : 기능등급 상승에 따른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기대
 사업주 :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건설산업 : 청년층 진입으로 건설업 고령화 해소

퇴직공제제도 소개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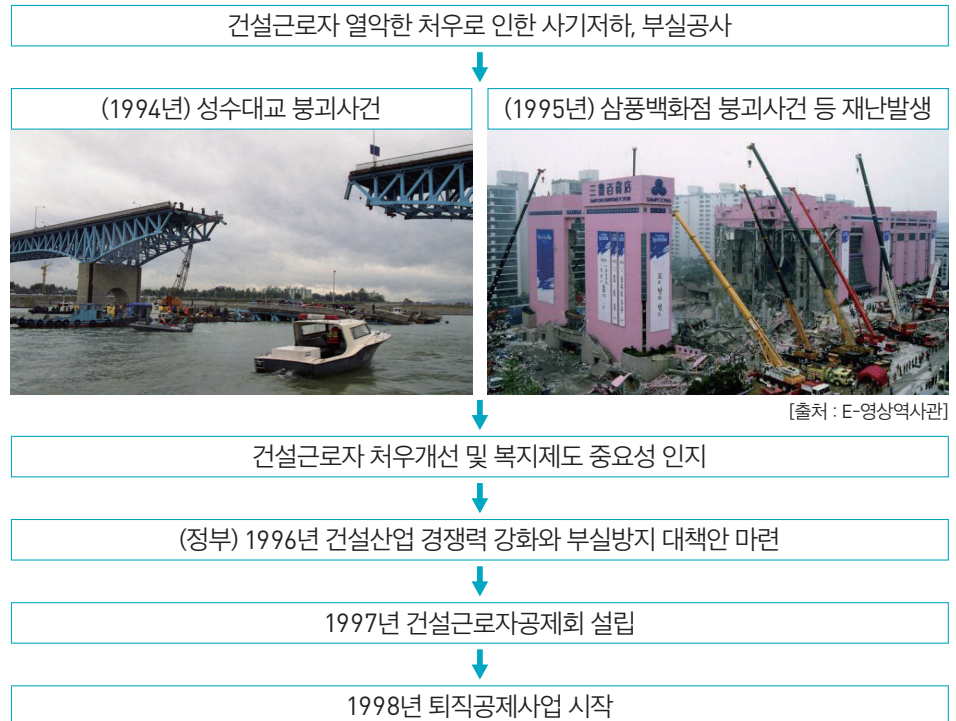
1. 제도 소개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써,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출력공수)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구분	주요 내용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관 : 고용노동부) ※ 이하 '건설근로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근거 ▶ 퇴직공제 당연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 ▶ 퇴직공제금 지급 등 제도의 주요 내용
② 건설산업기본법 (소관 : 국토교통부) ※ 이하 '건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가입대상 공사 범위 및 퇴직공제부금 원가 반영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에 대한 우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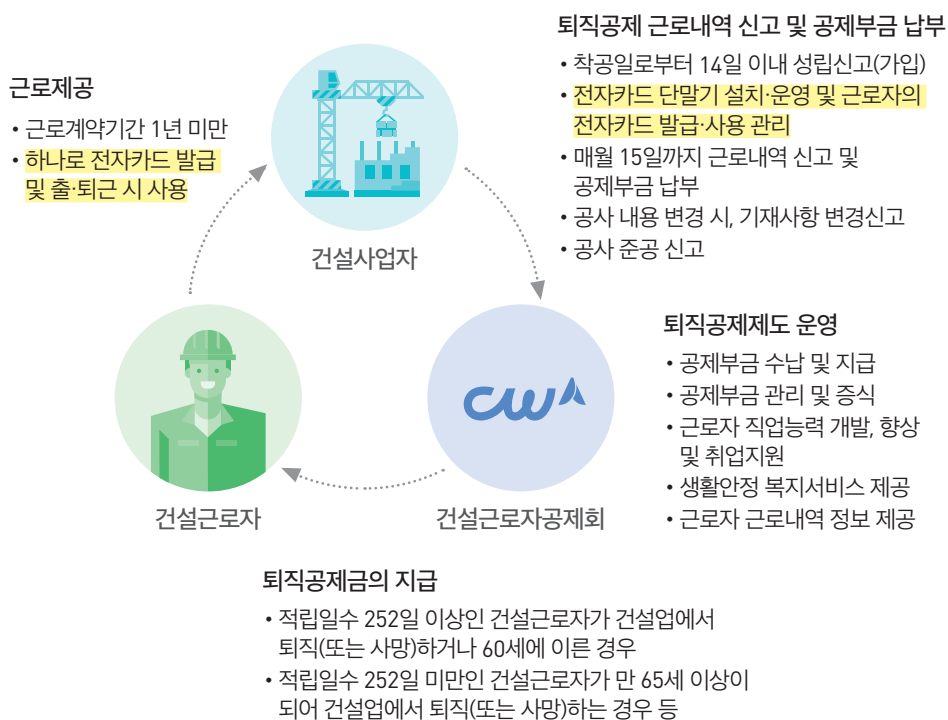
2. 도입 배경 및 목적



3. 제도 운영 방식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향후에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표시는 전자카드 적용사업장 해당사항



참고

▶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퇴직공제제도는 국적, 성별, 연령, 소속, 직종 등에 의해 피공제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 14조

4.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퇴직공제제도 가입의무가 있는 **당연가입대상공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공사에정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1)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해당공사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주가 가입 가능

2)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구분	범위
공공공사	국가 지자체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공사	
민자유치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
민간공사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또는 50억 원 이상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공사의 경우 '20. 5. 27. 입찰공고 공사부터 확대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건축, 토목 등)의 경우 '20. 9. 8. 입찰공고 공사부터 확대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 건설근로자법 개정('19. 11. 26.)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유형	'20. 11. 27.~'22. 6. 30.	'22. 7. 1.~'23. 12. 31.	'24. 1. 1. 이후
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참고

▶ 공사예정금액이란?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 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추정가격으로 판단

※ 연간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등 계약단가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도급받을 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 과정

구분		'98. 1	'01. 8	'04. 4	'07. 1	'08. 1	'10. 9	'12. 4	'18. 1	'20. 5. 27
적용 공사	공공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억 이상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민간	500호 이상 공동 주택		300호 이상 공동 주택		200호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100억 이상			50억 이상
부금일액		2,100원			3,100원	4,100원		4,200원	5,000원	6,500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건축, 토목 등)는 '20. 9. 8.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근거법령

- ☐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5. 건설사업주 제도이행 방식

1) (기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퇴직공제 WEDI시스템을 통해 성립신고부터 근로내역 신고·공제부금 납부, 기재사항 변경, 공사 준공신고 등의 업무를 이행합니다.

<https://wedi.cw.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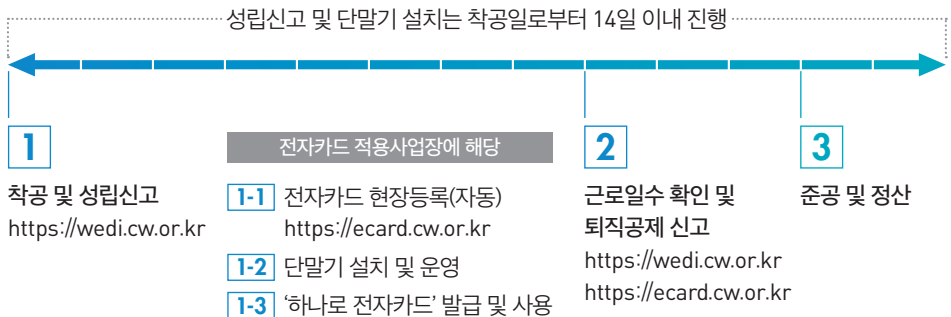
2) (확대) 전자카드제 적용공사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근무기록 관리, 퇴직공제 신고·납부 등의 업무를 이행합니다.

<https://ecard.cw.or.kr>

사업주 퇴직공제 업무 이행 절차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1. 제도 소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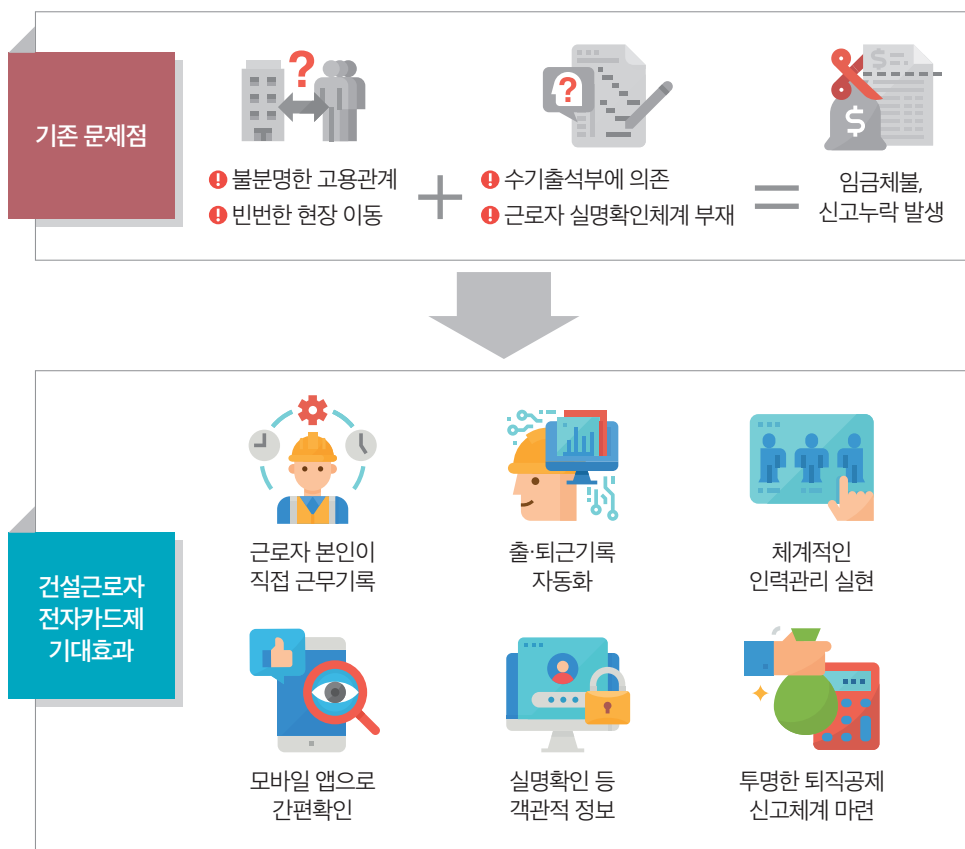
건설사업주는 전자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소속과 직종, 출·퇴근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내역 신고·납부, 임금지급 등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출근기록과 사업주의 퇴직공제·임금지급 기록을 투명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음

예시) 홍길동 10일 출근(태그) - 퇴직공제 8일 신고(누락) - 임금 12일치 지급(과다) 등

2. 전자카드제도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시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관리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3. 전자카드제도 운영체계

금융형 전자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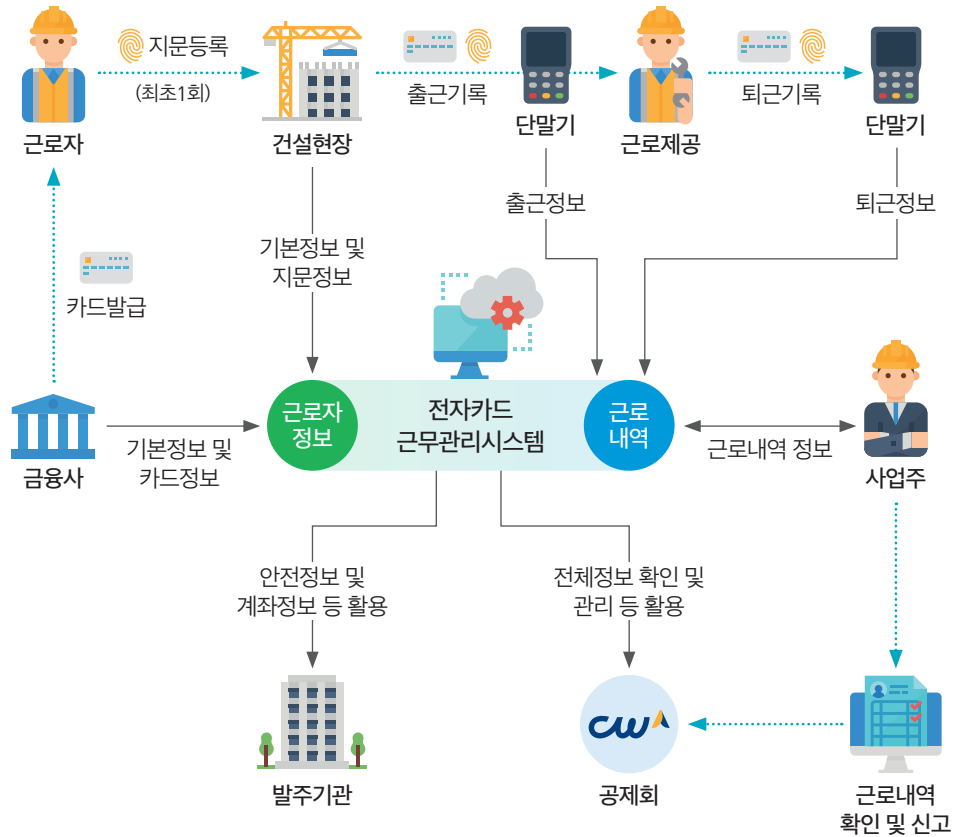


- 한번 발급 시 등록 없이 전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 출·퇴근 기능 및 금융기능 탑재
-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발급

전자카드 단말기



- 공제회 지정 받은 단말기
- 카드 및 지문 처리 가능
- 카드 미발급 시 지문은 30일만 유효, 발급자는 현장종료 시까지 사용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퇴직공제 업무, 임금지급 업무 등 다양한 투입 인력 관리업무 수행

• 대외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서울시 One-PMIS, 고용 보험 등) 정보연계 가능

•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근무이력 확인 가능

1) 출·퇴근 신고

근로자는 전자카드 태그 또는 지문인증, 모바일 앱을 통해 건설현장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이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됨

2) 근로내역 관리(전자카드로 남긴 출근명부의 소속과 직종 등의 정보를 관리)

퇴직공제 신고와 출력현황 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소속 및 직종을 입력해야 하며, 사업주는 일자별로 투입근로자 정보와 출력현황 등 확인 가능

3) 퇴직공제 신고(매월 지난 한 달 간 근로자들이 일한 일수를 공제회로 최종 신고)

원수급인과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서 매월 생성되는 근로자별 근로내역(공수)를 확인하고, 매월 15일까지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전자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직접 근로자 정보 및 근로내역을 등록하여 근로일수 수기신고 가능

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및 전자카드 단말기 소개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인식기능(RFID)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서,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와 외국인도 문제 없이 모두 발급 가능(단, 비대면 발급 일부제한)



-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체크 또는 신용카드
 -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개인정보 파악** 및 **부정사용 방지** 가능
 - 공제회 지정 위탁 발급기관 : ① **하나은행** ② **우체국**
 - 건설근로자는 전국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 한 번만 발급받으면 **전 현장에서 사용 가능**(현장별 일회용 카드 NO!)

2) 전자카드 단말기

전자카드 태그정보를 인식하고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매개체입니다.

- 전자카드 및 지문을 활용한 출·퇴근 기록이 가능하며, 전자카드 적용사업장의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가 사용하기 편한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신용불량자와 외국인도 문제 없이 모두 발급 가능(단, 비대면 발급 일부제한)



- 설치의무 : 사업주(원수급인)
- 설치·운영기간 : 근로자가 투입되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설치 후 **준공 시까지** 유지
※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사전 구비必
- 적정대수 : 예상 투입 인원수 **100~150명당 1대**
- 설치위치 : 근로자의 현장 출·퇴근 경로 및 작업 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
※ 현장 상황에 따라 모바일 카드리더기 또는 앱(GPS 기반)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단독 사용 및 비용 정산 불가)

※ 업체별 단말기 종류 및 가격, 설치문의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참조

3) 전자카드제 근무관리 모바일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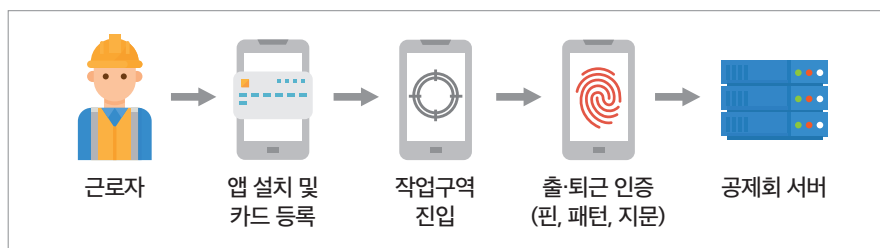
전자카드 근무관리 App을 통해 건설근로자 및 건설사업주가 모바일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용 앱

- 근로자의 어플리케이션에 본인의 전자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GPS 기반** 출·퇴근 신고 및 근로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며, 입구가 특정되지 않고 현장 범위가 넓은 토목 현장 등에 고정형 단말기와 더불어 보완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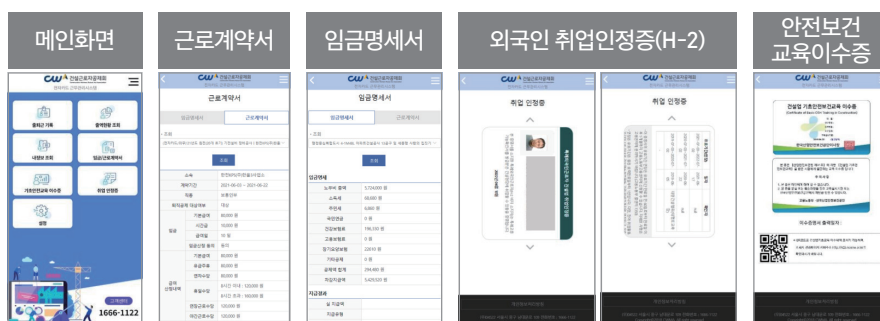
※ 건설사업주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현장 영역을 설정한 후 사용 가능

전자카드근무관리 앱(근로자용) 운영 절차



- 근로자용 앱에서는 근로자의 전자카드 근무기록과 함께 퇴직공제 적립내역, 기초안전 보건교육이수증, 취업인정증, 임금명세서 등을 편리하게 확인 가능

앱에서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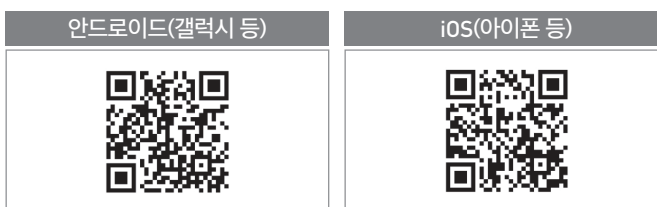
② 현장관리자용 앱

※ 전자카드시스템(ecard.cw.or.kr) 내 대리인으로 등록된 관리자만 앱 사용 가능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사업주의 스마트기기(관리자 개인인증서 등록 필수)에 앱을 설치하여 근로자 출·퇴근 기록, 근로자 정보 조회, 근태관리(출·퇴근 내역 조회)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별도의 모바일 리더기*를 구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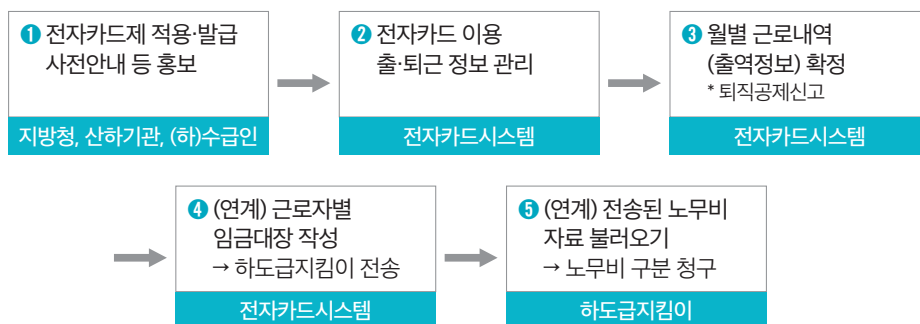
* 모바일형 카드리더기의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 단독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퇴직공제부금비 내 정산 불가

앱 설치화면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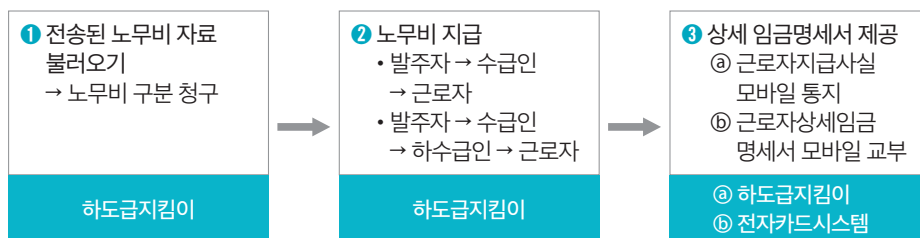
1) 전자카드시스템 임금대장 연계 노무비 청구

| 전자카드제 → 하도급지킴이 연계 업무처리 절차



2) 하도급지킴이 지급정보 연계 임금명세서 교부<’22. 6월 이후~>

| 하도급지킴이 → 전자카드제 연계 업무처리 절차(안)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제9절(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전자카드제도 및 임금직접지급제도 관련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발주기관 업무처리 매뉴얼」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https://ecard.cw.or.kr>) - 교육·홍보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발주기관의 역할

1 제도이행 단계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역할	내용	관계법령
1단계 입찰(설계) 공고 단계	퇴직공제 소요비용 (퇴직공제부금비)의 원가반영	입찰 공고문에 본 공사는 퇴직공제가입 및 제도이행 대상 공사임을 명시 협조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0조
		도급계약당사자(발주자, 도급인)는 물량명세서 및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퇴직공제부금비)*을 반영 * 1) 직접노무비의 2.3% 이상 반영 2) 전자카드 사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 비용 포함 반영	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2조의2 제3항 및 건산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2단계 공사 시공 단계	사업주의 성립신고 및 공제부금 신고·납부 이행지도	사업주가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 성립신고(가입)할 수 있도록 이행지도 협조 * 전자카드 적용사업장은 단말기 설치 필수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0조의4 및 건산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매월 15일까지 공제회로 누락 없이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행지도 협조(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제회의 행정지도 요청 시 협조)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적용 (사유 발생시)	도급인 납부의무 발생사실 통보 및 공제부금 납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3단계 공제부금 정산 단계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 정산	공사 준공 시 적정 공제부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원가반영금액 내에서 정산 ※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확인서 등 확인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및 건산법 시행령 제83조

2 제도이행 주요 세부사항

1.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1) 입찰 공고문 상 퇴직공제가입 및 제도이행 대상 공사임을 명시 협조

- 입찰 공고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퇴직공제제도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공사는 2020. 5. 27.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건축, 토목 등)는 2020. 9. 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입찰공고문 작성 시, 본 공사는 퇴직공제가입 및 제도이행 대상 공사임을 명시(전자카드 적용 공사의 경우 단말기 설치·운영 사항 포함) 또는 '보험료 등 사후정산' 란에 퇴직공제부금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소요비용(퇴직공제부금비) 반영

-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발주자, 도급인)는 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량명세서(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원가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이때,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비용을 포함하여 원가에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 산정기준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유의사항

- ❶ 퇴직공제 적용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원가 미반영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원가반영 의무 준수·강화가 필요합니다.
- ❷ 입찰공고(설계) 단계에서 원가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또는 과소 반영된 경우) 추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반드시 원가에 적정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 ❸ 시공 중 계약(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직접노무비)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퇴직공제 부금비도 함께 변경해야 하며, 사업주가 공제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❹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❺ 전자카드 사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비용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포함하여 원가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 ❻ 원가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원가반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원가반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 5. 27. 위반 사항부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 2.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
- 건설근로자법 제26조(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19. 11. 26.〉
 - 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 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2. 사업주 성립신고 및 신고·납부 이행지도

1) 퇴직공제 성립신고(가입) 이행지도

- 퇴직공제 당연(의무)가입 사업주가 사업시작일(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성립 신고(가입)를 할 수 있도록 이행지도 협조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 특히,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확대된 단기(공사기간이 매우 짧은) 소규모 공사가 착공 후 적시에 신속히 가입될 수 있도록 이행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미가입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 ※ 사업주가 성립신고 의무 위반 시 공제회에서 '직권성립'을 위한 제반자료(도급계약서, 원가내역서 등)를 발주기관에 요청 드릴 수 있으니, 이 경우 제반자료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전자카드 적용사업장의 원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개설과 함께 즉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사용하도록 이행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통해 근로내역을 기록하지 못하여 근로내역 신고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성립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이행지도

- 공제가입사업주가 사업장에 고용된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매달 15일까지(최소, 준공에 따른 공제부금 정산 전까지) 공제회에 누락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 전자카드 적용 공사의 경우 사업장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자카드 사용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현장 출·퇴근 명부, 퇴직공제 신고내역, 임금지급 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제도 이행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❶ 입찰공고문에 본 공사는 퇴직공제가입 및 제도이행 대상 공사임을 명시하여 사업주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퇴직공제에 미가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❷ 성립신고, 공제부금 신고·납부 등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제회의 행정지도 요청 시, 이행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공제부금 누락(민원) 방지를 위해 발주 기관의 제도이행 협조가 절실합니다.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0조의4, 제13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및 제5항
- (과태료) 건설근로자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3.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적용

1) 도급인 납부의무 발생사실 통보 및 공제부금 납부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변동·소멸 시, 도급인 및 사업주는 공제회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또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1〉제도 개요

퇴직공제부금 미납 방지 및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 5. 27 시행된 제도로써,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공제 공제부금납부 주체



* 근로내역 신고 의무(매월 15일까지)는 여전히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습니다.

〈2〉도급인, 납부특례 적용 사업장의 의미

- (도급인) (사업주가 원수급의 경우) 발주기관, (하수급의 경우) 해당 공사의 원수급
- (납부특례 적용 사업장)
 - '20. 5. 27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이 없는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 공사) 중 납부특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 '20. 5. 27 이전에 입찰공고 한 공사는 납부특례 적용은 받지 않으나, 사업장의 부도·파산 등으로 퇴직공제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원·하수급 간 공제부금 '대납신청'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미납금액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발주기관은 대납신청 불가)

〈3〉납부특례 사유

-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기로 사업주와 서면 합의한 경우
- 사업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 사업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사업주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도급인의 납부의무 범위

- (서면합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도급인 납부금액 결정
- (파산, 회생, 공동관리절차, 기타)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 부금비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용
 - * 특례사유 발생일 이전의 미납공제부금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가 발생함(서면합의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름)

〈5〉 제도운영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	도급인 납부의무 발생원인 사실 통보	사실관계 확인 (필요 시)	도급인 납부의무 발생 사실 통지	공제부금 납부
이행 주체	도급인 또는 사업주 → 공제회	공제회 → 도급인 또는 사업주	공제회 → 도급인 또는 사업주	도급인 → 공제회

※ 납부특례 관련 각종 통보·신청 서식은 관계법령(별지서식)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변동(소멸 등)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사업주가 반드시 해당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공제회에서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는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내역 신고 의무(매월 15일까지)는 여전히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습니다.

〈6〉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신고 방법

- 도급인 또는 사업주는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방법	퇴직공제 EDI시스템(wedi.cw.or.kr), 팩스, 우편, 이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제출서류	①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원인 사실 통보서 1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 ② 최종 도급계약서 1부(통보일 현재 기준) ③ 최종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1부(통보일 현재 기준) ④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통보일 현재 기준) - 기성서류 등 ⑤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도급인과 사업주와의 서면합의(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서면합의서 1부(합의 당사자, 납부의무 기간·금액 등) (2) 사업주의 회생, 파산, 공동관리 등(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파산선고 결정문, 공동관리절차 개시 의결서,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필요(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4호) (3)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주가 도급인에게 공제부금을 요청한 관련 공문 등)

〈7〉 납부특례 사유 발생 변경신고 방법

- 도급인 또는 사업주는 서면합의의 변경·파기, 회생·파산 등의 취소 등으로 도급인의 직접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도급인 또는 사업주가 변동사실을 공제회로 통보한 시점부터 공제부금 납부주체(의무)가 도급인에서 기존 사업주로 다시 변경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변동사유가 서면합의의 기간 연장 등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납부의무가 유지됩니다.

접수방법	퇴직공제 EDI시스템(wedi.cw.or.kr), 팩스, 우편, 이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제출서류	①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변동 통보서 1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② 최종 도급계약서 1부(통보일 현재 기준) ③ 최종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1부(통보일 현재 기준) ④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통보일 현재 기준) - 기성서류 등 ⑤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의 변동 등에 의한 경우(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의 파산·회생 등 폐지에 의한 경우(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취소 결정문, 회생 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의결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도급인의 공제부금 지급에 의한 경우(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8〉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기한

도급인이 최초로 내야하는 공제부금 (공제회가 도급인에게 발생 사실을 통보하기 전 확정된 미납금액)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향후 발생(신고)예정 공제부금 (통보일 이후 발생예정인 공제부금)	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기한 내 공제부금 미납부 시 과태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9〉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

-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0	200	300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17조
- (과태료) 건설근로자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 공제부금 정산 1) 사업주와의 공제부금 정산

- 발주기관은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확인서'(전자카드 사업장에 해당)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❶ 공제부금 정산 시 공제회에서 발행한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원가반영액 내에서 정산하되, 납부확인서에 사업주가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내역이 있을 시 완납 후 정산해야 합니다.
- ❷ 전자카드 적용사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 ❸ 사업주가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이 원가반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정산의무는 없으나, 건설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단, 처음부터 공제부금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과소반영 된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정 금액을 반영 후 정산해야 합니다.
- ❹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공제 대상근로자가 실제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납부확인서에 공제부금 납부액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는 4대보험 자료(일용근로내역) 또는 노무비(임금) 정산자료 등과 비교하여 공제부금이 납부 후 정산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❺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가 있는 발주자는 매월 수입인의 임금지급내역(노무비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시어, 퇴직공제 대상자(일용노무)가 있을 시 해당 공제부금이 적시에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참고 ▶ 공제부금 오정산 사례

-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원가에 반영된 공제부금을 모두 사업주에게 정산(지급)해준 사례
- 사업주가 납부확인서 일부를 위조하여 실제 납부금액 대비 과정산한 사례
- 사업장에 일용직(퇴직공제 대상근로자)이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부금을 전액 삭감하여 정산한 사례

※ 위 사례 등은 발주기관의 내·외부 감사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필히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납부확인서 상단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신 후 정산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발급문서 확인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 ① 상단 “발급문서 확인” 클릭
 - ② 사업주가 제출한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확인번호 입력
 - ③ 퇴직공제부금 비교 검토

[illegible]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의2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5항 및 제6항

참고

▶ 전자카드 단말기 정산관련

- 정산방법 및 범위 : 구매(임대) 및 운영 등 소요비용은 '퇴직공제가입에 드는 비용' 정산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확인서(별첨2)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정산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정산 관련 법령〉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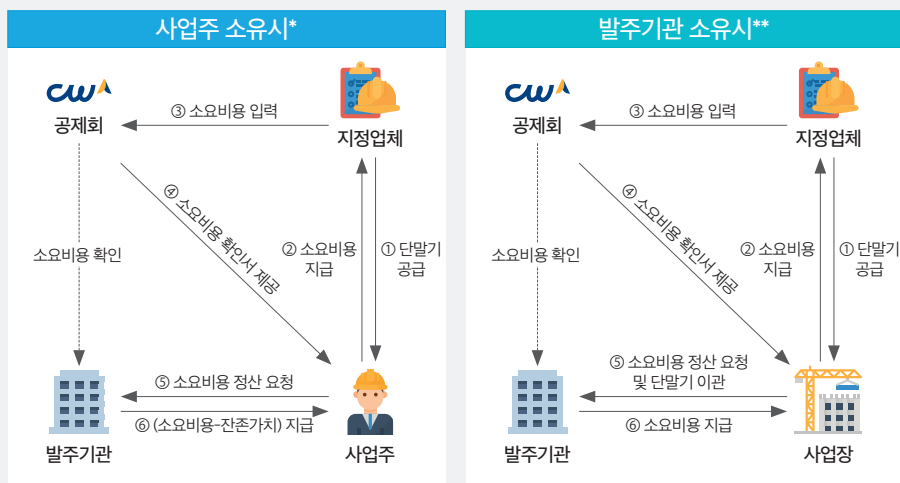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정산 가능 항목 〉

1. 제품가격(구매 또는 임대비용)
2. 설치·철거비용(노임 및 운송비 포함)
3. 운영비용(통신비, 수선(수리)비, 유지보수비)

〈 정산관련 유의사항 〉

- 터게이트 등 퇴직공제 출입관리 용도 외 발생 비용 정산 불가
- 단말기를 제외한 추가 발생 비용(터게이트, 발열감지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 받을 수 없음
- 모바일 단말기의 경우 지정단말기가 아닌 보완적 수단으로 퇴직공제 부금비 내에서 정산 불가
- 사용중 발생한 수선(수리)이 아닌 고의적 파손 또는 특정인의 귀책사유(차량에 의한 파손 등)에 따른 경우, 수선(수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주가 유책임자에게 청구

- 소요비용 정산체계 : 구매방식 단말기의 소유권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주 간 소요비용 정산체계는 아래와 같으며, 임대방식의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가능항목 내 임대비용 정산



* **사업주 소유** :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 준공 시점의 단말기 제품 잔존가치를 제외한 비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산 받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소요비용 정산 시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중 설치·운영비용 확인서 표기는 단말기 운영기간에 따라 아래의 잔존가치를 자동 적용

구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잔존가치율	4년	75%	60%	30%	10%	0%

※ 정산받지 못하고 남은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다른 전자카드 공사에서 설치, 운영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음

** **발주기관 소유** : 발주기관에게 단말기 비용 전체 정산 후 단말기 인도

4

자주하는 질의·답변 FAQ

1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관한 사항

Q1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 기준이 되는 공동도급사의 공사에정금액은 얼마인가요?

A1 발주공사의 전체(모든 구성사 포함) 공사에정금액을 말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당연가입대상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에정금액은 발주공사 전체 공사에정금액을 말함

Q2 발주당시에는 공사에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에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이 되나요?

A2 발주 당시의 (최초)공사에정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당연가입 대상 공사가 아닙니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대상공사 판단기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에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 당시의 공사에정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유권해석 : 건설교통부 건경 58000-704, 1999. 4. 16.)

Q3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진행하되 설계변경을 통해 퇴직공제부금비 산정 후, 공제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목 또는 품목이 발주 기관에서 교부한 내역서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함
(관련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회제 41301-1966, 1999. 6. 28.)

Q4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에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이 되나요?

A4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됩니다.

-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 공사라도 해당 공사에정금액이 50억 이상(20. 5. 27. 입찰공고 이후)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됨
(관련 유권해석 : 국토해양부 건경- 2842, 2010. 6. 18.)

Q5 매건 작업지시 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도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인가요?

A5 발주공사 전체 공사에정금액이 기준 충족 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됩니다.

- 연간단가계약 공사도 발주공사 전체의 공사에정금액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사대상공사에 해당됨
(관련 유권해석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담당관실-435, 2005. 1. 27.)

Q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6 실시계획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에 준하는 실시계획승인일로 보아야 함
(관련 유권해석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담당관실-105, 2005. 1. 7.)

2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Q1 공동도급 등으로 인해 하나의 현장에 원수급이 여러 개인 경우, 원수급사별로 각각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A1 원수급사 별로 각각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현장 내 예상 투입인원수를 고려하여 사업주간 협의를 통해 단말기 설치 대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상 투입인원수 150명당 1대 권장

Q2 분리발주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계약 건별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공사계약건별로 단말기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다만, 분리발주공사로 지리적으로 같거나 동일업체의 두 개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업체별 출력인원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사계약건별로 단말기를 각 1대 이상 설치 후 공제회 관할 지사 및 센터에 문의를 통해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의 단말기 공유기능 사용 가능

Q3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형 카드리더기 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만 사용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은 1대 이상의 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Q4 전자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만 발급가능한가요?

A4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ex. 현장 내 정규직 직원 등) ① 신분증 ②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통장(계좌)이 있으면 전자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건설근로자 전용 통장 개설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또는 퇴직공제 적립 내역 확인 필요

Q5 신용불량자, 전자금융사기 연루자(보이스피싱 연루 등)의 전자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A5 신용불량자의 경우 은행 직접 방문을 통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전자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등기로 전달되어 약 3~4일의 기간 소요됩니다.

- 다만,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에 연루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12. 11. 금융감독원)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3조의2에 의해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지문으로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문으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분증을 전자카드사업부(또는 현장 관할 지사)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3 퇴직공제부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Q1 퇴직공제가입사업주(원수급인)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바,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Q2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 신청 시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영된 공제부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때의 퇴직공제부금 정산(또는 기성) 방법은 하도급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필요

2019.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19. 11. 26. 공포)으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적용공사 확대, 공제부금 일액 인상, 직접신고제·납부특례제, 전자카드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확대·도입·강화되었습니다.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20. 5. 27. 시행)

- ▶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사 범위 확대
 - (확대) 공공 3억 → 1억 이상 / 민간 100억 → 50억 이상
 - ※ 공사에정금액 기준
 - (적용 기준일) 입찰공고일 기준
 - (건설공사) '20. 9. 8 이후 공사
 -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 '20. 5. 27 이후 공사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20. 5. 27. 시행)

- ▶ 퇴직공제부금 6,500원 적용
(퇴직공제금 6,200원+부가금 300원)
- ▶ '20. 5. 27. 이후 입찰공고 공사 적용
 - ※ 입찰공고 건이 아닌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20. 11. 27. 시행)

- ▶ '20. 11. 27. 이후 입찰공고 공사 적용
(24년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
- ▶ 전자카드제 개요
 - 사업주는 전자카드제 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함
 -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함
- ▶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20. 11. 27. 이후)

구분	'20. 11. 27.	'22. 7. 1.	'24. 1. 1.
공공	100억	50억	1억
민간	300억	100억	50억

건설근로자 직접신고제 도입

(20. 5. 27. 시행)

- ▶ 사업주가 근로일수 누락 시, 근로자가 해당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직접 신고
- ▶ (신고인) 건설근로자 본인
- ▶ (대상 사업장)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전체
 - 준공 여부 관계없이 모두 가능
- ▶ (신고범위) '20. 5. 27.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 중 사업주가 누락한 근로일수
 - ※ 신고 의무기한(근로월의 익월 15일)이 경과한 근로일수만 해당
- ▶ (접수처) 공제회 지사·센터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도입

(20. 5. 27. 시행)

- ▶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에게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
- ▶ 납부특례 사유
 - 도급인이 사업주와 서면 합의한 경우
 - 사업주가 파산, 회생, 공동관리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20. 5. 27. 이후 입찰공고 공사 적용
 - ※ 입찰공고 건이 아닌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20. 5. 27. 시행)

- ▶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 5백만 원 이하
 - 사업주의 퇴직공제 성립신고 의무 위반
- ▶ 3백만 원 이하
 -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의무 위반
 -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위반
 -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 의무 위반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 퇴직공제 가입비용 반영 의무 위반
- ※ 20. 5. 27. 이후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 건 적용

공제회 본회·지사(센터) 연락처

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국제빌딩)	대표번호 1666-1122	Fax. 02-547-5718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다동, 국제빌딩)	ARS 연결 후 311	Fax. 0505-182-8371
서울남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동, BYC하이시티)	ARS 연결 후 315	Fax. 0505-182-8380
원주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무실동, 한국국토정보공사 빌딩)	033-746-5711	Fax. 0505-182-8379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인계동, 세영빌딩)	031-242-5711	Fax. 0505-182-8373
의정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의정부동, 삼성생명 빌딩)	031-876-5711	Fax. 0505-182-8382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2층 (구월동, 현대해상빌딩)	032-446-5711	Fax. 0505-182-8372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동, 현대해상 부산사옥)	051-462-5711	Fax. 0505-182-8374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남산동, ABL대구타워)	053-755-5712	Fax. 0505-182-8375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7층 (치평동,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062-352-5711	Fax. 0505-182-8376
전주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2가, 전라북도 건설회관)	063-244-5712	Fax. 0505-182-8378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이도1동, 대한항공빌딩)	064-721-5711	Fax. 0505-182-8384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둔산동, 한화생명빌딩)	042-525-5713	Fax. 0505-182-8377

부패·비위행위 신고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알선청탁, 예산낭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 ▶ 업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향응 등 요구 및 수수 행위
-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 공제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
- ▶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 ▶ 부적절한 금품, 선물 수수 등 자진 반환 신고
- ▶ 불공정 임대차계약(과다한 임대료 요구), 공사대금 부당감액(단가 후려치기) 등 공공기관 갑질 행위

접수방법

-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 → 부패·비위행위 신고센터 게시판 이용
-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다동111) 국제빌딩 7층 감사실
- ▶ 전화접수 : 02-519-2153
- ▶ 이메일 접수 : audit@cw.or.kr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모든 건설근로자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